

# 신안보 개념으로서 생명안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이란 분쟁

손기영\*

I. 서론
II. 선행 연구와 생명안보
III. 생명안보의 분석틀
IV. 사례연구
V. 결론
주제어: 생명안보, 인간안보, 국가안보, 우크라이나, 이란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전쟁을 포함한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기존의 개념을 해체·재구성해 생명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형성되어 작동원리가 국민의 생명보다는 국토 및 정권의 수호라는 목적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국제관계학에서 수행된 안보, 인권, 평화 연구의 토대 위에 생명 정치의 철학적 논쟁을 접목해 '생명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생명안보가 국토 및 정권 안보의 논리에 의해 어떻게 주변화(marginalization)되는지 혹은 충돌하면서 어느 정도 인식되는지를 담은 분석을 통해 밝힌다. 사례연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분쟁을 생명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관점에서 분석한다. 결론에서 안보의 대상이 국토나 주권보다는 인간의 안전과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추세를 반영하면서, 생명안보의 주류화(mainstreaming) 방안을 제시한다.

+ 『국제관계연구』 제27권 제2호(2022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22.12.27.2.139>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부원장

## I. 서론

2022년처럼 생명과 일상의 삶의 유지가 주목을 받은 적은 많지 않다. 2월 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 희생자들의 시신과 파괴된 건물의 잔해를 매일 영상으로 접하고 있다. 재래식 전쟁을 넘어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전쟁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다. 구소련에 속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 니아 간의 영토분쟁은 냉전기에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 기로 9월에 다시 격화되어 100여 명의 군인이 전사했다. 같은 달 중앙아시 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도 교전이 벌어져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쥘셉 나이(Joseph Nye) 교수는 “안보는 산소와 같아서 이것이 없어질 때 까지는 그 존재에 주목하지 않다가, 일단 없어진다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했다.<sup>1)</sup> 국가안보 사안은 국민의 일상의 삶과는 유리된 보 안 구역에서 소수의 엘리트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 군인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이 가장 큰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본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2차대전 후 처음으로 동원령 을 내리자 주목할 만한 후속 뉴스는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반대 시위와 함께 동원령을 피해 1주일 만에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탈출했다 는 소식이다.<sup>2)</sup>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되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Volodymyr Zelensky)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군대의 항전에 국제적 이목이 쏠린 사이에,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10월 현재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유럽에 퍼져있는 난민의 수는 760만 명을 넘어섰다.<sup>3)</sup> 이 숫자는 우크라이나 인구 4,400만의 6분의 1이고, 국토 수호나 정권 유지만큼 개인의 생명 보호는 중요한 가치임

1) Joseph S. Nye,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1995), p. 91.

2) *New York Times*, September 28, 2022.

3)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kraine Refugee Situation,” <https://data.unhcr.org/en/situations/ukraine> (검색일: 2022년 9월 22일).

을 잘 보여준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전쟁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전쟁을 피할 수 없게(inevitable) 만드는 것은 아테네 국력의 성장과 이것이 스파르타에 초래한 공포(fear)”라고 하기 오래전부터 전쟁은 인류사를 채우는 가장 역동적인 사건 중의 하나였다.<sup>4)</sup>

가능한 한 전쟁을 막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생명과 일상의 삶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냉전 후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이 된 내전, 인종 청소, 난민, 빈곤 등의 문제에 대응해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나 시민사회가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간안보는 국가안보 사안의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가 사회에서 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도 않다.<sup>5)</sup> 국가가 생명이나 인권의 보호에 실패해 대규모 학살이나 인권 유린이 발생할 때, 타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지만,<sup>6)</sup>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았고, 오히려 사태를 키운 경우도 많았다.<sup>7)</sup> 심지어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조지아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언급했고, 이 논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4) Thucydides 저, Warner, R. 옮김·해제, *The Peloponnesian War* (London: Penguin Books, 1972), p. 49.

5) 김민수, “인간안보의 헌법적 보장과 국가안보와의 조화,” 『법학논집』 21권 1호 (이화여대법학연구소, 2016), p. 131.

6) 이신화, “비전통적 안보와 동북아 지역협력,” 『한국정치학회보』 42권 2호 (한국정치학회, 2008), pp. 411-434; 이신화,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6권 1호 (한국정치학회, 2012), pp. 257-281.

7) 장지향, “‘아랍의 봄’ 10주년: 중동 민주화의 한계,” 『이슈브리프』 2020-30 (아산정책연구원, 2020. 10.05); David Rieff, “A New Age of Liberal Imperialism?” *World Policy Journal*, Vol. 16, No. 2 (1999), p. 4; Mohammed Ayoob,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 6, No. 1 (2002), pp. 81-102; Ki-Moon Ba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ument A/63/677, January 12, 2009; Alex J. Bellamy, “Withe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2005 World Summit,”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20, No. 2 (2006), pp. 143-169.

도 적용되었다.<sup>8)</sup>

찾아진 전쟁과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류의 투쟁은 여기서 좌절할 것인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생명 존중과 인권 증진의 가능성이 아직 존재함을 시사한다. 생명 정치(bio-politics)라는 논리를 제시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생명에 대한 인류의 태도가 전근대를 넘어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현격히 달라졌음을 보여준다.<sup>9)</sup> 전근대기에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고, 국가가 군주의 소유물이라서 신민은 군주가 마음대로 “죽게 할 수도” 있었다.<sup>10)</sup>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시대로 접어든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이고 기술과 인간 의식의 발전은 생명과 인권 보호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TED가 가장 사랑한 미래학자’로 꼽힌 후안 엔리케스(Juan Enriquez)는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생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윤리적 행동의 가능성에 주목한다.<sup>11)</sup> 2040년 합성생물학이 발전해 육류의 60% 이상은 동물을 도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안 육류를 먹는 것이 보편화되면, 인류는 생명에 대해 더 윤리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도 냉전 후 시작된 전쟁 중에 성공적으로 국익을 실현한 전쟁이 거의 없으며, 이것은 군사력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sup>12)</sup>

안보의 행위자와 피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말할 것도 없이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 인간안보라는 대의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sup>13)</sup> 이

8) Heather Ashby, “How the Kremlin Distort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rincipl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April 7, 2022,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2/04/how-kremlin-distorts-responsibility-protect-principle> (검색일: 2022년 9월 23일).

9) Miche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translated by Robert Hurley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p. 138.

10) Foucault (1978), p. 138.

11) Juan Enriquez, *As the Future Catches You: How Genomics & Other Forces Are Changing Your Life, Work, Health & Wealth*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5).

12) Lawrence Freedman, “Why War Fail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the Limits of Military Power,” *Foreign Affairs*, Vol. 104, No. 4 (2022).

13) 윤지원·배일수,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한 고찰,” 『전략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p. 232; 서보혁,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남북관계에의 적용 가능성,” 『동북아연구』 제27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p. 40; 박휘락, “천안함 사태 이후 인간안보의 논의 방향,” 『평화학연구』 제11권 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p. 357.

연구는 논란이 많은 인간안보와는 다른 국가안보의 하나의 축으로서 ‘생명안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개념을 제시한다. 그 목적은 생명안보를 국토안보나 정권안보의 수준으로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의해 정복당한 국토의 완전한 회복을 추구하듯, 국토안보가 한 치의 땅도 타국의 압박에 내줄 수 없다는 논리로 작동한다면, 생명안보는 하나의 생명도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의 판단이나 무력 행사에 휘말려 희생시킬 수 없다는 논리다.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는 문서인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33)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국민, 영토, 정부, 주권이다. 구체적으로는 (1) 상주하는 인구, (2) 명확한 영토, (3) 정부 (4)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다.<sup>14)</sup> 국가는 국민, 국토, 정부, 주권을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영토적 야심 혹은 다양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인을 포함한 자국민과 타국민을 대규모로 희생시켜왔다. 한 치 땅의 가치가 수백, 수천 명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은 국가안보의 작동원리가 국토 및 정권에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 이유 중의 하나를 지금도 남아 있는 전근대적 군주시대의 안보 논리에서 찾는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형성되어 작동원리가 국민의 생명보다는 국토 및 정권의 수호라는 목적에 치중되었음을 밝힌다. 둘째, 국제관계학에서 수행된 안보, 인권, 평화 연구의 토대 위에 푸코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으로 이어지는 생명 정치의 철학적 논쟁을 접목해 ‘생명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생명안보가 국토 및 정권 안보의 논리에 의해 어떻게 주변화(marginalization)되는지 혹은 충돌하면서 어느 정도 인식되는지를 담은 분석을 통해 밝힌다. 셋째, 사례연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분쟁을 생명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관점에서 분석한다. 결론에서 안보의 대상이 국토나 주권보

14)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40: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https://www.oas.org/juridico/english/treaties/a-40.html> (검색일: 2022년 9월 12일).

다는 인간의 안전과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추세를 반영하면서,<sup>15)</sup> 생명안보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 II. 선행 연구와 생명안보

### 1. 국가안보와 생명관리정치

1960년대에 전 세계적인 반전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국가안보 사안은 흔히 군주나 소수의 통치자가 전쟁과 폭력적 수단의 독점을 통해 결정했다. 16세기 정치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가 피렌체의 군주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헌정한 『군주론』에서 제시한 안보 개념은 당연히 군주나 군주국의 안보에 관한 것이다. 마키아벨리즘을 형성하는 주요 표현 중의 하나가 “미덕(virtue)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자멸을 가져오지만, 악(vice)으로 보이는 것을 따르면 안보와 번영을 가져온다”라는 부분이다.<sup>16)</sup> 17세기 절대군주 시대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을 때, 국가안보는 군주가 보유한 주권 혹은 통치권의 수호를 의미했다.

민족국가의 형성과 함께 국가안보는 더 중요해졌지만, 본격적인 학술 논의를 시작한 곳은 2차대전 중의 미국이다.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은 “한 나라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이익을 희생할 필요가 없을 때, 그리고 도전을 받았을 때 전쟁으로 이익을 수호할 수 있을 때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sup>17)</sup>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은 “국가안보가 가지는 고유의 의미는 외국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했다.<sup>18)</sup>

한편 전근대 국가가 근대국가로 변모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 인구의 생명정치(bio-politics of the population)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푸코의 생명 권력(bio-power) 논의를 보면, 절대군주 시대에는 군주가 신민의 생명

15) 전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권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p. 26.

16) Nicolo Machiavelli, *The Pri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 62.

17) Walter Lippmann, *U.S. Foreign Policy* (London: Hamish Hamilton, 1943), p. 32.

18) Harold D. Lasswell, *National Security and Individual Freedom* (New York: McGraw-Hill, 1950), p. 79.

을 좌지우지할 ‘생사여탈권’을 보유했다.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군주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전쟁이 국가 내부의 ‘모든 이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바뀌면서 타국민을 살해하도록 훈련받는다. 군주가 행사한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오래된 권리”가 근대국가가 행사하는 “살게 하거나 죽음 속으로 몰아가는 권력”으로 대체되었다.<sup>19)</sup> 국민을 살게 내버려 두는 권력에서 살게 만들거나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권력으로의 전환이 근대 사회 성립의 기초였다.<sup>20)</sup> 푸코는 통치 대상이었던 신민들이 18세기에 들어 국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생, 사망, 수명, 생식능력, 건강, 질병 주기, 식사와 주거를 포함해 관리대상이 되는 ‘인구(population)’로 변모했다고 주장한다.<sup>21)</sup> 근대 이후의 국가는 살인과 같은 범죄의 절대적인 금지나 통제가 목표가 아니라, 수치화, 통계, 계산, 예측 등을 통해 사회를 허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전장치(security apparatuses)를 확보하려고 했다. 푸코에게 생명은 “권력이 관여하고 조절하고 증대시키고 확산시켜야”할 대상이었다.<sup>22)</sup>

푸코가 제기한 생명 권력의 논의를 이어 나가며 20세기 말 국가 주권 밖에 존재하는 난민 혹은 미국이 운영하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힌 테러 용의자에 주목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철학자 아감벤이다. 20세기를 지나면서 정부는 생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 예외(exclusion)와 격리 대상의 지정을 하나의 정상적인 정부의 기능으로 변화시켰다.<sup>23)</sup> 아감벤은 국가가 과거 죄수들만 대상이었던 감시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가 가진 예외와 감시라는 권력이 모두를 속박할 가능성을 주장한다.<sup>24)</sup> 아감벤은 생명 관리에 대한 국가 기능의 확대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가 기능의 확대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19) Foucault (1978), p. 138.

20) 진태원, “생명정치의 탄생 - 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화과 사회』 19권 3호 (문화과지성사, 2006), p. 221.

21) Foucault (1978), p. 25.

22) 진태원 (2006), p. 220.

23) Giorgio Agamben 저, K. Attell 옮김·해제, *State of Excep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p. 1.

24)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dord: Standord University Press, 1998), p. 115.

관타나모 수용소의 테러 용의자들은 전근대 시대였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했을 것이고, 20세기 초라면 나치가 유대인을 대한 방식처럼 독가스실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2. 인간안보와 생명안보

냉전 후 ‘실패국가’들이 생겨났고, 내전, 인종 청소, 난민, 빈곤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안보 개념 자체가 확장되어 인간안보를 포함하는 비전통 안보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sup>25)</sup> 1994년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보고서는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강조하며 국가안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sup>26)</sup> 하지만, UNDP가 제시한 인간안보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안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개념 자체의 명확성, 위협의 대상, 안보의 준거집단, 행위자, 실현 방안, 국제 공조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sup>27)</sup>

인간안보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분석의 틀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이 모색되었다. 예를 들어 인간안보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 인도적 지원이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8)</sup>

UNDP는 인간안보라는 포괄적 개념의 세부 영역으로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사회안보, 정치안보를 제시했다.<sup>29)</sup> 이 연구는 생명안보를 논의하면서 <표 1>과 같이 인간안보 논의에 포함된 교육

25) Barry Buzan,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Lynne Rienner, 1998).

26)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24.

27) 윤지원·배일수 (2021), p. 232; 서보혁 (2012), p. 78; 박휘락 (2010), p. 366.

28) 라미경,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공적개발원조(ODA),” 『전략논단』 6집 (해병대 전략연구소, 2007), p. 99; 유호근, “비전통안보 이슈로서 식량안보,” 『OUGHTOPIA』 29권 2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 재건연구원, 2014), p. 127; 전재성,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안보 논의,” 『국제관계연구』 11권 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p. 87.

29) UNDP (1994), p. 24-25.



및 개발 등의 의제들은 안보 이슈가 아니라 국가, 국제기구, 혹은 비정부기구의 정책 이슈로 재분류한다. 그 이유는 인간안보라는 논의를 통해 지나치게 확대된 안보 개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안보와 조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30)</sup>

특히, UNDP가 예시한 7개의 안보 영역 중 개인안보(personal security)는 이 연구가 제시하는 생명안보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타국으로부터 전쟁의 위협 및 자국 정부나 집단으로부터 폭력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sup>31)</sup> 하지만 인간안보의 영역에 개인안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UN이나 다른 국제기구는 전쟁과 폭력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 결국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표 1> 인간안보와 생명안보

	인간안보	생명안보
안보 대상	인간	국민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국인, 비국민(난민)의 생명에도 주목
안보 전략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개발 협력, 삶의 질의 유지와 향상, 환경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	전쟁 및 재난의 방지와 발생 시 빠른 일상예의 복귀
안보 형태	비전통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요소 포함
국가안보와의 관계	국가안보와 대립하거나 별개 개념, 국가가 능력 부족으로 인해 혹은 다른 안보 이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한 영역에서의 안보	국가안보의 하나의 축을 담당
초국가성	초국가적 개념	국가안보의 하부 개념이면서도 초국가적으로 확장 가능한 개념
주요 행위자	UN 및 국제기구	국가

출처: 저자 작성.

30) 윤지원·배일수 (2021), p. 232; 서보혁 (2012), p. 78.

31) UNDP (1994), p. 30.

### 3. 평화연구와 생명안보

생명안보 논의는 평화연구와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분명하다. 평화연구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한다.<sup>32)</sup> 두 개의 개념 중에 갈통이 추구한 것은 적극적 평화인데, 구조적 폭력이 없이 사회정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갈통의 평화론이 폭력을 부정하는 인간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강자와 약자로 양분된 사회구조에 기반해 정의를 찾는다는 점에서 구조적 평화를 넘어 보편적 생명권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생명안보와는 구별된다.

경제학자이면서 평화학자라고 할 수 있는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의 평화론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볼딩은 정치적 안건의 논의에서 국경 문제를 제외하기, 잠재적 적국 간 상호적, 호의적 행동 장려, 비폭력 이론과 행동 개발, 평화 관련 정부와 비정부 기관 개설, 평화와 분쟁에 관한 연구 등을 주장했다.<sup>33)</sup> 하지만, 국제적 분쟁을 넘어 다양해진 실존적(existential)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일상의 삶의 보호라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점진적 평화 정착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타국 국민에게도 정신적 공황을 일으키는 이유는 21세기 인류가 가지는 생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하나의 자원이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훼손되지 말아야 할 절대적 가치로 보는 인류가 많아지고 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죽음 혹은 파괴된 삶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34)</sup> 엔리케스 교수는 “산업 혁명 기술이 노예 제도라는 끔찍한 노동 시스템을 끝냈듯이, 기술은 지금도 윤리라는 골대의 위치를 계속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sup>35)</sup>

32) Galtung (1996).

33) Kenneth Boulding,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p. 109-122.

34) Enriquez (2005).

35) 『조선일보』, 2022년 4월 23일.

### Ⅲ. 생명안보의 분석틀

#### 1. 안보의 준거 대상 조정

안보의 준거 대상(referent)은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다. 첫째, 국가라는 하나의 포괄적 단위를 전제로 위협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지 말고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국토, 정부, 주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 안보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급조된, 실재하는(existential), 혹은 지정학적으로 형성된 국가안보 위협에 맞서 정권이 자신에 유리한 사실을 제시하고 국제정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국익이라는 개념이다.<sup>36)</sup> 그 결과 영토의 정복, 국토의 수호, 혹은 정권의 보호를 위해 국민이 희생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인간안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측면을 안보의 준거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간안보는 인간 사회의 다면적 특성을 나열함으로써 어떤 영역이 안보의 우선 대상인지 불명확했고, 군사안보와 국토안보에 초점을 두는 국가안보의 논의와 유리되면서 마치 UNDP의 인간개발프로젝트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요약하면, 생명안보를 통해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안보의 준거 대상은 생명과 이 생명체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누리는 일상의 삶이다.<sup>37)</sup>

#### 2. 안보 개념의 종적 확대

인간안보를 포함한 비전통안보 논의가 안보 개념의 횡적 확대를 가져왔다면, 이 연구는 안보 개념의 종적 확대를 추구한다. 국가안보라는 포괄적 개념을 해체해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국토, 정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생명안보, 국토안보, 정권안보로 크게 나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안보 개념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지 분석한다. 정부와 주권을 함께 정권안

36) Jutta Weldes, "Constructing National Interes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 No. 3 (1996), p. 277.

37) 이용수, "안보화, 인간안보, 그리고 한국: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협에 대한 경험적 연구," 『문화와 정치』 6권 3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p. 39.

보호 묶은 이유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때 정부는 보호 대상으로서 권력의 주체, 즉 정권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주권, 역사, 이념과 같이 한 민족국가가 지닌 여러 가치가 정권이라는 한시적인 조직에 모두 수렴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정권은 주도적으로 주권, 역사, 이념을 해석해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다.

〈표 2〉와 같이 이 연구는 국가안보라는 큰 틀 안에서 생명안보가 정권안보의 하부 개념인 이념안보(민주주의), 역사안보(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 공유 분쟁) 등과 충돌하면서 어떤 형태로 서열화되는지 추적한다. 생명안보는 기존의 비전통안보 개념인 환경안보, 보건안보 등의 논의에서 공동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초래하는 부분을 포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의 하부 개념으로 규정한다. 물론, 세계화 이후 전쟁, 내란, 전염병, 환경파괴가 초래하는 실존적 위협의 초국가성으로 인해 생명안보는 확장된 국가안보의 성격을 가진다.

〈표 2〉 국가안보의 여러 형태

안보형태	국토안보	정권안보	생명안보
안보 대상	영토, 영해, 영공	정부, 주권, 이념, 역사	국민의 생명이 주요 대상이지만 외국인, 비국민도 포함
주요 안보 개념	군사안보	인정안보, 이념안보, 역사안보, 경제안보	평화안보, 환경안보, 보건안보, 식량안보
주요 행위자	국가	국가	국가, 국민
주요 위협	외부 침략, 내전	외부침략, 내란, 정부 전복, 불인정(주권, 이념, 역사), 경제 위기	파괴된 삶(전쟁, 환경 재앙, 전염병, 기아, 궁핍)
안보 수단	군대, 동맹	군대, 동맹, 경찰, 전략 연구, 이념과 역사 교육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명 주류화(life mainstreaming), 생명 보장과 삶의 파괴 방지를 위한 인식의 전환

출처: 저자 작성.

## IV. 사례연구

여기에서는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이란 분쟁을 조명한다. 이 연구는 정부나 정부의 대리인이 정보와 정책의 홍수 속에서 어떤 위협과 안보 개념을 정책의 주요 '뜻말(signpost)'로 제시하고, 어떤 것을 무시하는지를 조사한다.<sup>38)</sup> 우크라이나 전쟁은 생명안보가 무시되며, 국토안보와 정권안보가 두드러진 예로 제시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지도부가 생명안보에 반하는 역정보(逆情報, disinformation)를 흘린 후 군인과 민간인을 전쟁으로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의 사망과 부상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미국-이란 분쟁은 양국 간 다양한 충돌이 있었지만, 확산을 방지해서 최소한의 생명안보는 지켜진 사례로 제시된다.

###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가안보를 논의할 때 이 연구가 국가안보의 주요 대상으로 파악한 국토, 정권, 생명의 중요성이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어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지를 조사한다.

#### 1) 러시아의 국가안보 논의

##### (1) 푸틴과 생명안보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써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2월 24일 시작하면서 장문의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크렘린궁 사이트에 연설 영상과 함께 게재된 담화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군사안보보다 먼저 생명안보를 언급하면서 시작된다. 푸틴은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소중한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돈바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건과 러시아에 대한 안보 보장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재차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

38)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78), p. 5.

각합니다”라고 했다.<sup>39)</sup> ‘돈바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건’이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와 네오나치’에 의해 돈바스 지역 ‘수백만의 주민들이 ‘대학살’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물론 푸틴은 연설문 서두에 생명안보 문제를 한번 언급한 후 연설이 반 정도 지난 후 다시 돈바스 문제를 언급해, ‘돈바스’라는 단어를 전부 다섯 번 말하지만, 생명안보와 관련해서는 두 번 정도 언급하는 데 그친다.

대신 푸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확장에 따른 군사안보 위협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NATO’라는 단어만도 14번 언급했다. 푸틴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영토에 - (우리의 역사적인 영토에) - 완전히 외세에 의해 통제되고 나토군이 집중적으로 주둔하며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는 집단, 즉 우리에게 적대적인 ‘반러시아’ 집단이 만들어진다 는 것입니다”라고 했다.<sup>40)</sup>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역정보를 흘리면서 군대를 동원함으로써 러시아 군인, 시민, 그리고 국제사회를 기만했고, 전쟁에서 대규모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작전을 하고는 곧 귀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파병된 군대와 일반 국민에게 유포한 것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숫자를 공표하지 않고,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동원령을 내렸다. 러시아는 정규군이 아닌 와그너 그룹(Wagner Group)이라는 푸틴과 관련된 민간 용병 기업을 통해 많은 병력을 조달했는데, 8월까지 2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전사자 수에서 와그너 그룹 소속이 5천 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sup>41)</sup> 용병을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식 사망자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푸틴은 왜 이렇게 자국민과 타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의 길로 들어섰을까? 소련의 붕괴 후 내외의 우환에 직면한 러시아에서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오늘날의 푸틴을 만들었다. 1999년 8월 7일 2차 체첸 전쟁

3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메시지,” 크렘린, 2022년 2월 24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 러시아어 번역은 『통일시대』의 연설 전문 참조.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 (검색일: 2022년 9월 15일).

40) 푸틴 (2022).

41) *New York Times*, August 11, 2022.

발발 이틀 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발탁했고 푸틴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전쟁을 8개월 만에 끝낸다. 옐친의 집권기인 1994년에 발발해 2년 가까이 계속된 제1차 체첸 전쟁에서 체첸 공화국이 승리해 사실상의 독립국 지위를 얻었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르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조지아 침공은 주간지 『타임』이 2007년에 푸틴을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로 선정한 직후였다. 타임은 푸틴을 “강철과 같이 단호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자유 이전에 질서를 선택”해 러시아를 세계열강 대열에 복귀시켰다고 주장했다.<sup>42)</sup>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뒤 기존에 60%대였던 푸틴의 지지율은 80%대로 급등했는데, 유가 하락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위기에 처했지만,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결국, 전쟁을 통해 지지율이 반등하는데 푸틴이 전쟁에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

푸틴은 소련의 부활을 꿈꾸면서 소련의 국가(國歌)와 상징 등을 다시 도입했다.<sup>43)</sup> 푸틴의 권력욕과 영토욕이 NATO 팽창에 따른 러시아의 군사안보 위협으로 재포장되어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생명안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푸틴의 동원령에 대응해 반전 시위에 나선 한 모스크바 시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다. 난 아이들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sup>44)</sup> 국민 생명의 보호는 정치가들의 구호 속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지만, 역사적으로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는 호전적인 군주의 빈번한 전쟁행위였다.

## (2) 푸틴과 역사안보

정권안보의 하부 개념으로 이 연구가 지칭한 역사안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푸틴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

42) Richard Stengel, “Choosing Order Before Freedom,” *Time*, December 19, 2007.

43) *BBC News*, March 28, 2014.

44) *Associated Press*, September 21, 2022.

주변 국가들에 퍼져 사는 러시아계 민족들이 상상의 세계인 ‘루스키 미르 (Russian World)’로 정의되는 공동의 역사, 종교, 언어, 문화 공간에 살아야 한다고 본다.<sup>45)</sup> 러시아 편에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약간 다른 슬라브 민족국가의 이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로 인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지 푸틴이 “범슬라브 민족국가를 꿈꾼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sup>46)</sup>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연합국가(Union State of Russia and Belarus)’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친러 정책을 취해왔지만, 루카셴코는 자신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을 포함하는 슬라브 민족국가를 구상했지, 푸틴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푸틴이 2022년 9월에 승인한 ‘인도주의 정책(humanitarian policy)’이라는 외교 문서에는 러시아와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 밖에 거주하는 2,500만 명의 러시아인들과의 연대 및 보호를 강조했지, 슬라브 민족의 단결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sup>47)</sup>

같은 편인 푸틴과 루카셴코 간에도 존재하는 러시아 혹은 슬라브 민족주의에 대한 차이를 보면, 민족주의가 이들의 반대편에서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측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민족 정체성은 아니다. 슬라브 민족주의와 러시아 민족주의 간의 차이가 분명한 와중에 푸틴은 전쟁 3일 전, 2월 21일 대국민 연설에서 ‘역사’라는 용어를 16번 언급하며 “현대의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의 공산주의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강변한다.<sup>48)</sup> 푸틴은 레닌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특히 돈바스를 무리하게 우크라이나에 끼워 넣어 러시아라는 단일 국가를 붕괴시켰다고 보았다.

45) Reuters, September 6, 2022.

46) Press Serv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Interview to Agence France-Presse,” July 21, 2022, <https://president.gov.by/en/events/interview-to-agence-france-presse?openVideo=true&> (검색일: 2022년 9월 10일).

47) Reuters, September 6, 2022.

4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메시지,” 크렘린, 2022년 2월 21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28>. 번역은 『통일한국』 “푸틴 대통령의 2월 21일 연설 전문” 참조,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 (검색일: 2022년 9월 5일).



### (3) 푸틴과 국토안보

전쟁이 불리하게 진행되면서 9월 말 수세에 몰리자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푸틴은 갑자기 영토적 통합성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푸틴은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을 위협받는다면 러시아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다”라고 공언했다.<sup>49)</sup> 푸틴은 9월 30일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라며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의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다.<sup>50)</sup> 푸틴은 미국이 일본에 두 번 핵무기를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sup>51)</sup>

무리한 합병은 결국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푸틴이 합병된 지역을 방어할 목적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인류 최후의 전쟁(Armageddon) 가능성을 케네디(대통령)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직면한 적이 없었다”라며 푸틴의 핵 위협은 농담이 아니라고 경고했다.<sup>52)</sup>

## 2)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 논의

### (1) 젤렌스키의 생명안보

전쟁 발발 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미국과 서방의 계속되는 경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sup>53)</sup> 젤렌스키는 “서방 국가들이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밝히거나 미국 등이 대사관을 철수하는 와중에도 SNS에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전쟁 가능성을 부인했다.<sup>54)</sup> 전쟁 직전인 1월에 수행된 키예프 국제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젤렌스키의 재선을 원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해서,<sup>55)</sup> 그에 대

49) *Associated Press*, September 21, 2022.

50) 『연합뉴스』, 2022년 9월 30일.

51) 『연합뉴스』, 2022년 9월 30일.

52) *New York Times*, October 6, 2022.

53) *ABC News*, January 26, 2022.

54) 『중앙일보』, 2022년 2월 26일.

55) 『중앙일보』, 2022년 2월 26일.

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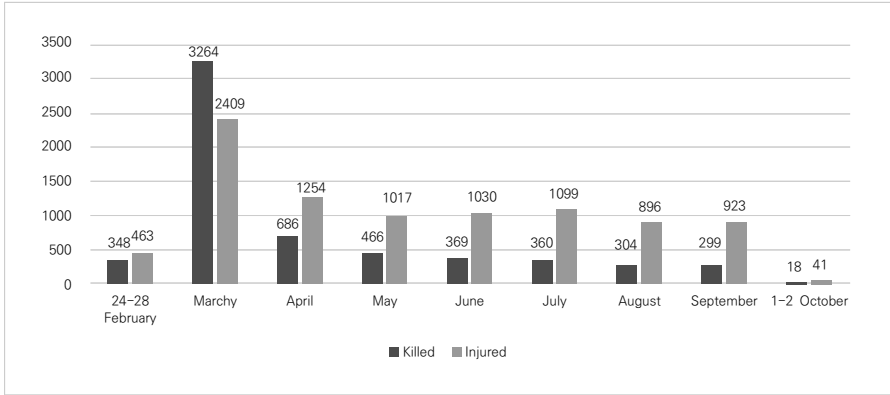
전쟁 발발 후 젤렌스키의 항전 의지와 우크라이나 군대의 활약으로 젤렌스키는 ‘전쟁 영웅’의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전쟁 가능성에 대해 역정보를 흘려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가져온 재앙을 겪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비등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전쟁 가능성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만약 우리가 알렸다면, 나는 지난 10월 이래 매일 70억 달러를 잃어버렸을 것이고, 러시아가 공격을 개시한 이후 3일 만에 우리를 점령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sup>56)</sup>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공포에 휩싸여 국가를 탈출하거나 국부의 유출로 경제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거둬들이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역정보를 국민에게 흘렸고, 그 결과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인터뷰한 많은 우크라이나인은 젤렌스키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제 파탄을 막으려고 했으며, 정부가 미리 전쟁에 대비하게 했다면 훨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57)</sup> UN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10월 3일 현재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이 6,114명이 사망하고 9,132명이 부상했으며, 사인은 주로 대포, 로켓, 미사일, 공중 폭격이다.<sup>58)</sup> <그림 1>과 같이 OHCHR이 제공한 정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월별 민간인 사상자 수인데, 전쟁 발발 직후인 3월에 3,264명이 죽고 2,409명이 부상했다. 7개월 남짓한 전쟁에서 반수 이상이 전쟁 발발 후 한달 내에 사망했다. 전쟁 초기에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국 정부의 역정보에 의해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무고한 생명의 손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56) *Washington Post*, August 19, 2022.

57) *Washington Post*, August 19, 2022.

58)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kraine: civilian casualty update 3 October 2022,” October 3, 2022, <https://www.ohchr.org/en/news/2022/10/ukraine-civilian-casualty-update-3-october-2022> (검색일: 2022년 10월 10일).

<그림 1>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 수 (2월 24일 ~ 10월 2일)



출처: OHCHR (2022).

## (2) 젤렌스키의 국토안보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가 일으킨 지속적인 국토안보 위협을 우크라이나는 NATO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을 통해 해소하려고 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푸틴의 러시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NATO 회원국들은 NATO의 동진(eastward expansion)에 대해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 위협을 평가절하했다. 또한 러시아에 의한 안보 위협에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노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이나 다른 회원국들은 별다른 안전 보장을 하지 않으면서 방치했다.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한 강연에서 NATO의 확장이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친미 국가가 되면서 크림반도에 NATO의 군사기지가 건설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sup>59)</sup>

젤렌스키가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불굴의 영토 수복 의지 때문이다. 9월 14일 러시아에 점령됐다가 수복된 하르키우주 이지움(Izium)을 방문한 젤렌스키는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오직 한 방향으로 전진할 뿐”이라고 소셜 미디어에 적었다.<sup>60)</sup> 전쟁의 결과를 아직 예측하기 힘들지만, 우

59) MSNBC, March 5, 2022.

60) 젤렌스키의 트위터 메시지, <https://twitter.com/tpyxanews/status/1570005703573766149?lang=ar-x-fm> (검색일: 2022년 9월 30일).

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합병된 영토를 수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그런데도 젤렌스키는 텔레그램에 올린 연설문에서 “역사는 기어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스, 빛, 물, 음식을 가질 것이다… 그것도 너희 없이!”라고 주장했다.<sup>61)</sup> 휴전을 거부하는 젤렌스키의 영토 수복 의지는 4천4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일상의 삶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 2.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이란 분쟁

트럼프행정부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펼치며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하자, 이란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은 우라늄농축을 시작하고,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sup>62)</sup>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해외 작전 특수 부대인 쿠드스(Qods)를 포함한 이슬람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를 테러조직으로 지명했다.<sup>63)</sup>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과 이란은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최대의 전쟁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두 나라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방지해 생명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 1) 트럼프와 생명안보

존 볼턴(John Bolton)백악 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9년 5월 5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조되는 징후와 경고에 대응해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과 폭격기들을 미 중부사령부 지역(중동)에 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sup>64)</sup> 볼턴은 “미국은 이란 정권과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어떤 공격에도

61) 『조선일보』, 2022년 9월 15일.

62) *Financial Times*, January 5, 2021.

63) U.S. Department of State, “U.S. Designate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April 12, 2019, <https://2017-2021.state.gov/u-s-designates-islamic-revolutionary-guard-corps-as-a-foreign-terrorist-organization/index.html> (검색일: 2022년 9월 27일).

64) 『연합뉴스』, 2019년 5월 6일.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sup>65)</sup> 패트릭 샐너헨(Patrick Shanahan) 국방장관 대행이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12만 명의 미군을 중동지역에 파견한다는 계획을 5월 9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지만,<sup>66)</sup>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면서 보내면 훨씬 더 많이 보낼 것이라고 했다.<sup>67)</sup> 트럼프의 진심을 알기는 힘들지만, 대규모 파병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내를 비치는 순간이다. 5월 12일 오만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2척), UAE(1척), 노르웨이(1척)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이 벌어졌고, 14일에는 바그다드 정부 청사와 의사당, 외교 단지가 있는 그린존에 로켓포 1발이 떨어졌다. 국무성은 5월 15일 비상 근무를 제외한 모든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의 철수를 명령했다.

6월 20일, 이란은 자국 영공에 들어온 미국 드론을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혔고, 다음날 이란 국방부는 방공시스템 호르다르(Khordad)-3가 미국 무인정찰기 RQ-4A 글로벌 호크를 격추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sup>68)</sup> 이란은 이 드론이 영공을 침범했다고 좌표를 제공했지만, 미국은 다른 좌표를 제시하면서 이란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생명안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결정은 트럼프가 이란의 드론 격추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킨 경우다.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 “우리는 어젯밤 세 곳에 보복하려고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죽을 수 있는냐고 물으니 ‘150명입니다’라는 게 한 장군의 대답이었다. 무인기 격추에 비례하지 않아서 공격 10분 전에 내가 중단시켰다”라고 밝혔다.<sup>69)</sup>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보복 공격을 주장했다지만, 트럼프는 적국의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 손실 가능성 때문에 공격을 중단시켰다.

물론 몇 달 후 2020년 1월 3일 미국은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습으로 살해했다. 솔레이마니는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제2대 라흐바르(최고 지도자) 다음으로 서열 2위의

65) *Axios*, May 7, 2019.

66) *New York Times*, May 13, 2019.

67) *Business Insider*, May 15, 2019.

68) *Washington Post*, June 20, 2019.

69) *Guardian*, June 21, 2019.

권력자로 알려져 있었다. 트럼프는 솔레이마니를 “전 세계 테러리스트 중 1위”라 부르면서 살해를 지시해 이란과의 전쟁 위기에 휘말렸다.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제82 공수사단에서 3,000명을 중동으로 추가 파병해서 위기에 대처했다.<sup>70)</sup> 트럼프는 이란의 보복이 예상되자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보복하면 이란의 52개 장소를 목표로 “매우 빠르고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71)</sup>

## 2) 이란과 생명안보

웨슬리 클라크(Wesley Clark)는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왔고 코소보 전쟁에서 NATO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역임한 퇴역 장성이다. 클라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국내 정치를 볼 때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보복이 불가피하지만, 보복했을 때 미국의 여론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성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 이것이 역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sup>72)</sup> 그의 예측은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 이란은 보복을 감행했지만, 미국인의 생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솔레이마니의 장례식 직후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된 작전이 시작됐다. 2020년 1월 8일 이란 국영 TV는 “이라크 내 미군 주둔지를 향해 수십 발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보도했다.<sup>73)</sup> 미국 정부 관계자도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서부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여러 발의 로켓탄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라크에 있는 두 개의 기지로 미사일이 발사되었지만, 사상자가 없다는 것을 알렸다.

이란은 미국인 사상자 발생을 피하는 방식으로 공습을 단행했다. 공격 대상이 된 미군 기지는 이미 공습에 대한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왜냐하면 이란이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에게 공습 계획을 알렸고, 압둘 마흐디 총리는 이 사실을 미군 측에 전달했다.<sup>74)</sup> 이란은 솔레이마니 살해에도 불구하고

70) *Associated Press*, January 2, 2020.

71) *CNN*, January 5, 2020.

72) *Associated Press*, January 2, 2020.

73) 『중앙일보』, 2020년 1월 8일.

74) *Guardian*, January 8, 2020.

하고 미국과의 분쟁을 확대할 계획이 없었고,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드론 격추에서도 이란은 미국인의 생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트럼프가 보복 공격을 중단시킴으로써 확전을 막았지만, 이란도 유인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회피했었다.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혁명수비대 소속 항공우주부대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같은 시간에 P8으로 불리는 정찰(스파이) 항공기가 정찰 드론 가까이서 비행하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무인의 드론과 달리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약 35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다. 우리는 영공을 침범한 이 항공기를 공격 타깃으로써 조준할 권리가 있었지만 이 미국 항공기를 공격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이 없는 무인 항공기를 때렸다”라고 말했다.<sup>75)</sup>

### 3. 요약

사례 연구에서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 및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발표문이나 인터뷰 등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가진 다양한 안보 의식과 정책 결정 배경을 조사했다. 생명안보의 실패사례로 제기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젤렌스키의 안보관이 생명안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미 잘 인식하고 있듯이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푸틴이고, 푸틴이 추구하는 국토안보 및 정권안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생명의 희생을 담보로 구축된 개념이다. 물론 미어샤이며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NATO의 확장이 전쟁의 근본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푸틴의 안보관 및 역사관을 보면 그의 러시아 혹은 러시아인 우선주의가 얼마나 주변 국가에 대한 위협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안보관의 문제가 부각된 이유는 물론 푸틴이 저지른 전략적 오판 때문이다. 인구 500만 명도 안 되는 조지아를 점령하거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을 발판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쉽게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소련 붕괴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올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타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75) 『뉴시스』, 2019년 6월 21일.

그럼 생명안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젤렌스키의 문제는 무엇인가? 젤렌스키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큰 생명의 손실을 일으켰다. 생명의 손실과 함께 젤렌스키의 전략적인 오판도 전쟁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이다.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를 NATO와 EU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친서방 노선을 추진했고, 푸틴에게 전쟁을 개시할 빌미를 준 것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중간국은 적절한 중간국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젤렌스키는 지나치게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 및 이란 군부의 태도는 생명안보 관점에서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전쟁을 시작할 것처럼 긴장을 고조시키다가도 기회를 봐서 2018년에 바로 대화를 재개했듯이 트럼프는 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했다. 이란의 군부도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대한 감정적 적대감의 표출과는 달리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인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가 제기하는 생명의 중요성은 국토 및 정권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가 국가안보의 의무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거 대상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V. 결론

이 연구는 생명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두 개의 사례에 대입해 그 설명력을 점검해보았다.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가 간 전쟁을 막는 방법으로 미국-이란 분쟁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양국 모두 수사적으로 대량 보복을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트럼프가 150명의 이란인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복 공격을 중단한 것이나, 이란이 미국 유인 정찰기를 격추하지 않는 행동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분쟁이나 국가안보 전략을 짤 때 가칭 ‘생명 영향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다.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지시할 때 보통 예상 민간인 사상자 규모에 대해서 미리 보고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6)</sup>



그러므로 미래의 과제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도 예상 사상자 수, 난민 수 등을 포함하는 생명 영향평가를 도입하면, 확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간 생명에 대한 태도의 역사적 변화에 근거해 생명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20세기만 해도 전쟁에서 적국 군대의 괴멸은 물론, 민간인의 대량 학살을 포함한 초도화작전이 보편적으로 행해졌지만, 냉전 종식 후 보스니아 내전에서 UN이 설정한 안전지대(safe areas)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공된 인도주의적 회랑(humanitarian corridor)은 적국 국민의 생명도 보장하기 위한 인류의 새로운 자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안보 개념의 종적 확대, 즉 서열화 현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입하면, 푸틴의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일상의 파괴로 표현되는 생명안보의 저해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인 인정안보(유라시아대륙에서 러시아의 중심국 부상)와 역사안보(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 공유)에 집중한 측면이 크다. 한편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군부는 전쟁 발발 전 전쟁의 가능성, 즉 생명안보의 저해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인정안보(NATO 및 EU 가입), 이념안보(민주주의권 진입), 경제안보를 추구했다.

생명은 어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가치와 비교해 적어도 동격이거나 더 중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사는 많은 생명의 희생을 담보로 전개되어왔다. 국제정치에서 전쟁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더라도 그 규모를 줄이고 평화의 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푸코와 아감벤이 정리한 생명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라는 틀에 생명에 대한 혁명적 인식 변화의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생명의 가치가 국가안보 논의에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생명안보가 국가안보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전통적 국가안보보다는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나아가 21세기 국가안보는 단순히 국가라는 경계에 머물기보다는 이 경계를 넘어 초국가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참고문헌]

- 김민수. “인간안보의 헌법적 보장과 국가안보와의 조화.” 『법학논집』 21권 1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6).
- 라미경.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공적개발원조(ODA).” 『전략논단』 6집 (해병대 전략연구소, 2007).
- 박휘락. “천안함 사태 이후 인간안보의 논의 방향.” 『평화학연구』 제11권 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 서보혁.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남북관계에의 적용 가능성.” 『동북아연구』 제27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 유호근. “비전통안보 이슈로서 식량안보.” 『OUGHTOPIA』 29권 2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 윤지원·배일수.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한 고찰.” 『전략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 이신화. “비전통적 안보와 동북아 지역협력.” 『한국정치학회보』 42권 2호 (한국정치학회, 2008).
- 이신화.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6권 1호 (한국정치학회, 2012).
- 이용수. “안보화, 인간안보, 그리고 한국: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협에 대한 경험적 연구.” 『문화와 정치』 6권 3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 장지향. “‘아랍의 봄’ 10주년: 중동 민주화의 한계.” 『이슈브리프』 2020-30 (아산정책연구원, 2020.10.05).
- 전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권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 전재성.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안보 논의.” 『국제관계연구』 11권 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 진태원. “생명정치의 탄생 - 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학과 사회』 19권 3호 (문학과 지성사, 2006).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dord: Standord University Press, 1998).
- Agamben, Giorgio 저. K. Attell 옮김·해제. *State of Excep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 Ayoob, Mohammed.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 6, No. 1 (2002).
- Ban, Ki-Moo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ument A/63/677, January 12, 2009.

- Bellamy, Alex J. "Withe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2005 World Summit."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20, No. 2 (2006).
- Boulding, Kenneth.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 Buzan, Barry,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Lynne Rienner, 1998).
- Enriquez, Juan. *As the Future Catches You: How Genomics & Other Forces Are Changing Your Life, Work, Health & Wealth*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5).
- Foucault, Michel 저. Robert Hurley 옮김·해제. *The History of Sexuality*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 Freedman, Lawrence. "Why War Fail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the Limits of Military Power." *Foreign Affairs*, Vol. 104, No. 4 (2022).
- Lasswell, Harold D. *National Security and Individual Freedom* (New York: McGraw-Hill, 1950).
- Lippmann, Walter. *U.S. Foreign Policy* (London: Hamish Hamilton, 1943).
- Machiavelli, Nicolo. *The Pri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 Morgenthau, Hans. *Politics Among Nations: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78).
- Nye, Joseph S.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1995).
- Rieff, David. "A New Age of Liberal Imperialism?" *World Policy Journal*, Vol. 16, No. 2 (1999).
- Stengel, Richard. "Choosing Order Before Freedom." *Time*, December 19, 2007.
- Thucydides 저. Warner, R. 옮김·해제. *The Peloponnesian War* (London: Penguin Books, 1972).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Weldes, Jutta. "Constructing National Interes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 No. 3 (1996).

#### 〈인터넷 자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메시지." 크렘린, 2022년 2월 21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28>. 번역은 『통일한국』 "푸틴 대통령의 2월 21일 연설 전문" 참조.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 (검색일: 2022년 9월 5일).

\_\_\_\_\_.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메시지.” 크렘린, 2022년 2월 24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 러시아어 번역은 『통일시대』의 연설 전문 참조.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 (검색일: 2022년 9월 15일).

Ashby, Heather. “How the Kremlin Distort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rincipl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April 7, 2022.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2/04/how-kremlin-distorts-responsibility-protect-principle> (검색일: 2022년 9월 23일).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kraine: civilian casualty update 3 October 2022.” October 3, 2022. <https://www.ohchr.org/en/news/2022/10/ukraine-civilian-casualty-update-3-october-2022> (검색일: 2022년 10월 10일).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40: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https://www.oas.org/juridico/english/treaties/a-40.html> (검색일: 2022년 9월 12일).

Press Serv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Interview to Agence France-Presse.” July 21, 2022. <https://president.gov.by/en/events/interview-to-agence-france-presse?openVideo=trueh> (검색일: 2022년 9월 10일).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kraine Refugee Situation.” <https://data.unhcr.org/en/situations/ukraine> (검색일: 2022년 9월 22일).

U.S. Department of State. “U.S. Designate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April 12, 2019. “<https://2017-2021.state.gov/u-s-designates-islamic-revolutionary-guard-corps-as-a-foreign-terrorist-organization/index.html> (검색일: 2022년 9월 27일).

[ABSTRACT]

## Life Security as a New Security Concept: Focused on the Russia-Ukraine War and US-Iran Conflicts

Key-young Son | Vice director and Professor at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a new concept of 'life security' by de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the existing concepts of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in order to respond to existential threats, including war, that humanity faces in the 21st century. The reason why a new idea is necessary is that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was form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state, and its principle of operation was focused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territories and the government rather than the lives of the people.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life security by grafting the philosophical debates of bio-politics on the foundation of security, human rights, and peace studies conduct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shows through discourse analysis how life security has been marginalized by the logic of homeland and regime security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or to what extent its existence has been perceived as it collides with other concepts. As a case study,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US-Iran conflicts are analyzed from various security perspectives including life security. In conclusion, it suggests a method for mainstreaming life security, reflecting the trend that the subject of security is focused on human safety and welfare rather than territories or sovereignty.

---

Key Words: Life Security, Human Security, National Security, Ukraine, Iran

투 고 일: 2022.10.14.

심 사 일: 2022.11.10.

게재확정일: 2022.11.30.